'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구체화 추진동력 장착

시, 올 시정 100대 핵심과제 선정 · 중점 관리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시정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시는 올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핵심으로, △사람중심 일자리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활력있는 성장도시 △창의적인 예술교육도시 △맑은공기 생태도시 △포용적인 복지도시 △공유기반 사회적 도시 등 7대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쟁점사업 및 시정 핵심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 ·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람중심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단계적 시행 △친환경 수소시범도시 조성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년창업지원 기반조성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문화재생을 통한 공동체일자리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일자리 육성 등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동학농민혁명 문화벨트 조성 △전주부성 일부 복원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재생사업 등 문화심장터 백만평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고 △법원 · 검찰청 법조삼현 기념관 건립 △팔복예술공장 운영 활성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품격있는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등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창의적인 예술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 활성화 △야호 숲놀이터 확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도시바람길 숲 조성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주정차 계획 등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동시에 '포용적인 복지도시' 구축을 위해 △치매 걱정없는 도시, 데이케어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전주형 저출생 대책 추진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단계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선순환경제 실현 △전주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벼룩시장 등 생활문화공간 확대 등을 과제로 선정해 '공유기반 사회적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시는 선정된 100대 핵심과제에 대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과제 완료시까지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이번에 선정된 100대 핵심과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지만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더는 미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들이다."며, "전주가 꿈꾸고 전북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주다움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100대 과제가 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민들의 안전 지킨다

전주시, 국토부 공모 사업 최종 선정
국비 6억 확보 올 연말까지 구축키로

전주시가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시민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교통 · 방법 · 방재 · 에너지 · 환경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연계 · 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국비 6억원을 확보, 올 연말까지 총 12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시는 그간 개별적으로 운용해온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해 긴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는 △112 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다.

유영문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과 경찰, 소방 출동 지원 등 협업체계가 구축돼 각종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돼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의 명성에 맞게 전주시를 안전도시로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토부 공모에 전국 59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송효철 기자

학생들로 북적북적 6일 전북대학교 교정이 개강을 맞아 신입생 동아리 모집을 하며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농업인 소득증대 · 독지향상 돕는다

전주시, 이달 한달동안 농정 지원사업 중점 접수기간 운영

전주시가 올 한 해 다양한 농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농번기를 앞둔 3월 한 달 간 농정 지원사업 중점 접수기간을 운영, 각종 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중소형관정 지원사업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농번기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먼저, 시는 쌀 · 밭 · 친환경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사업을 접수해 추진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 시 소득을 보전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170만원/1ha)와 밭작물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접직불제(50만원/1ha)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친환경농업 양성을 위한 친환경직접직불제(50~140만원/1ha)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는 또,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도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총 사업량은 190ha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 외의 타작물을 심으면 11ha당 34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3월 중 △농업 생산효율화를 위한 농업용 중소형관정 지원사업(44공/100~400만원) △이앙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57대/100만원) △과수 수확작업차량(10대/1,000만원)등 농업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농업인의 생산안정을 위한 각종 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영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대비한 농업인안전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운행 중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전체 보험료 70~75%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부담금은 20~25%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각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농업인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11개 마을/320만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를 위한 생생카드 지원(460명/13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1일/7만원) △상해 · 질병치료중인 농가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10명/월100만원) 등을 전개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갖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재력가 노려 거액 요구 불법체류자 실형

재판부, 공갈미수 혐의 징역 2년 · 벌금 200만원 선고

재력가를 노려 거액을 요구한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모(32)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50대 B모씨의 차량에 올라타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 1월 6일 새벽 B씨의 집 차고에 들어가 "50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적힌 협박 편지를 남기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료 중국인으로부터 "B씨가 돈이 많다"란 이야기를 듣고 지속적으로 B씨를 미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주거에까지 침입해 협박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살수차 운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차선 이상 주요 도로변 등에 회피승강장 설치 등 추진키로

전주시가 살수차를 가동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살수차 20대를 긴급 수배해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작업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연일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도로재비산먼지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가 가장 높은 비중(7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북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의 대다수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 비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4차선 이상 주요도로변 △도로오염 의심지역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도로분진흡입차량 2대를 도입해 도로변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설치(8개소)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농경지 소각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457개소, 1,777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306개소, 443대) △어린이집 마스크 보급(593개소 1만9860명)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67개소, 1,790명) 등 공기청정기(2,220대)와 마스크(2만1,650개)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소방본부, 화재 예방 소방용수시설 7070개소 점검

해빙기를 맞아 전북도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한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7070곳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간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용수 적정 압력 출수 여부 △겨울철 상수도 배관 동파 △소방용수시설 고장여부 △소방용수시설 주변 토사, 쓰레기 등 사용상 장애요인 제거 등이다.

또 점검 기간 동안 소화전 주변 불법 주 · 정차 근절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재도색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고지대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설치된 비상 소화 장치의 비품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강석훈 기자

실수한 직원 신상 담아 광고 전단 뿌린 사장 덜미

실수한 직원의 신상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마트 대표 A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업무 실수 내용과 직원의 신상을 공개한 전단 5만~10만여 장을 손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트 광고 전단에 '마진률 틀리게 해서 사장한테 욕먹은 직원', '영수증을 중복 입금한 직원' 등과 같은 내용을 넣은 뒤 해당 직원 사진과 실명을 실었다. 경찰은 인근 아파트와 마트를 찾은 손님에게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원들 승인 아래 전단을 배포했다. 장난삼아 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고소장을 낸 직원은 "이유 없이 사진을 찍더니 전단을 유포했다.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A씨가 평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갑질과 폭언 정황이 드러났다"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나서기로

올 상반기 18억원 목표

전주시가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각 세입부서에서 이관된 고액 ·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단장 김양원 전주부시장)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장징수단은 고액체납자 582명(체납액 59억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18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주 3회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징수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은닉재산을 추적 및 소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게 된다.

또한, 고질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과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한 강력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화물차 교통안전교육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경찰청은 6일 관내 농공단지 내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물류센터와 산업단지 등에 방문해 '맞춤형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와 관련된 사망사고는 76명으로 전체사망자 260명의 30% 점유했다.

특히 9지구대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자 9명 중 7명이 화물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강석훈 기자

김제 조합장 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경찰 수사 착수

김제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조합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마을 주민이 조합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내 6개 마을에서 유인물 40여장을 회수했다.

유인물에는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조합장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인물이 발견된 경로당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하고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강석훈 기자

진안서 60대 남성 실종

진안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6일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한 마을에서 A모(69)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가 '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집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범대 등 70여명과 마을 주변, 인근 야산 등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도 꺼져있어 행방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강력범죄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단순 실종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